

2011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생활제도

편집부

올해 하반기부터는 휘발유·경유값 할인이 종료되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인터넷사이트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부터는 어떤 제도들이 달라질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세제〉

- ◇ 미용수술·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무도 학원에도 붙는다.
- ◇ 부동산투자자 주택임대소득 공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6년간 임대소득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 ◇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 =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한다.
-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 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부동산〉

- ◇ '물딱지' 사도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된 뒤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합원 지분(물딱지)을 매입한 사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 하더라도 1가구에 대해서만 입주권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인정받지 못했다.
- ◇ 2~3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 = 실을 나누는 게 불가능했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7월부터 30㎡ 이상은 2개 실로 나눌 수 있다. 거실과 방을 구분할 수 있게 돼 현재 1인 가구 위주로 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2~3인 가구용으로 확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 ◇ 보금자리주택 소득기준 강화 = 현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산 및 소득기준을 하반기 중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까지 확대 적용한다.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을 넘으면 이들 단지에 청약할 수 없다.

〈금융·증권〉

- ◇ 청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상담 시스템 = 10월부터는 청각장애인들도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화 상담이 힘든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10월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상담 시스템이 마련된다.
-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져 = 10월부터는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는 것만으로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3개월 안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 자동이체때 부분이체 허용 = 7월부터는 개선된 자동이체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부분출금이나 이체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출금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이체 예정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왔다.
- ◇ 햇살론 취약계층 보증비율 상향 = 9월부터 햇살론 대출 시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현행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돼 대출 취급 은행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

- ◇ 통신사 대리점 주말 영업 안 해 = 7월 1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통신사들은 주말에 휴대폰을 분실한 가입자나 개통을 원하는 수요를 위해 토요일에도 임대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주요 거점 지역 위주로 대리점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 ◇ 가상이동통신(MVNO) 시작 = 소위 '저가 통신'으로 불리는 새 통신서비스가 시작된다.

KCT·온세텔레콤 등이 기본료 반값, 통화료 반값, 선불카드 사용 등을 내걸고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7월 1일부터 3세대(G) 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7배 빠른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한다.
- ◇ 디지털TV 지원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취약계층을 상대로 디지털TV 구입 때 1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디지털 컨버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약 31만가구다.

〈노동·환경〉

- ◇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 주40시간(주5일)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30만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만여 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 ◇ 장애인 고용 안하면 부담금 = 7월부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1인당 9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내는 고용 부담금이 현행 1인당 월 56만원에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이 점차 확대돼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

- ◇ 고액 재산 피부양자 건보료 납부 = 7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 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시지가로는 12억9,000만원,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 상당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전환 규모는 1,800여 명으로 7월 말 첫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 ◇ 기초생활자 취업엔 국민연금 할인 =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더라도 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임의가입만 가능했다.

〈교육〉

- ◇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 = 기존에 유치원비는 학부모들이 매번 분기별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를 월별로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유치원은 수업료와 그 외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받아야 한다.
- ◇ 주5일 수업 시범학교 선정 =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초·중·고교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10% 내외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시범 실시된다.

〈병무·외교〉

- ◇ 병역면탈 의심자는 확인신체검사 = 올해 11월부터 병역 기피자로 의심되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신검을 통해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 ◇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강화 = 7월 1일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중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으로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종사로 인한 연기를 제외한 납품·계약·바이어 상담을 위한 연기 등이 폐지된다. 질병으로 인한 연기도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등 조건이 강해진다.

〈생활〉

- ◇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 =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가 지번(地番)에서 도로명 체계로 바뀐다. 새 주소는 폭이 40m가 넘는 '대로', 12~40m인 '로', 그 이하인 '길' 등으로 나눠 도로 이름을 정하고 도로 시작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식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기 사용한다.
- ◇ 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가입 =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9월 30일부터 인터넷에서 고유 식별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 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게임·전자상거래 1만명 이상, 포털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인 모든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처리자는 가

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 통학차량 승·하차 지도 강화 = 12월부터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하차 시 차에서 직접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 태권도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 ◇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 지난 4월 29일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1월 20일부터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법을 어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 11월부터 50cc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이륜차 사고 시 기존에는 민법에 의해 손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휘발유·경유값 할인 종료 = 7월 6일 휘발유·정유 가격 할인 기간이 종료된다. 4대 정유사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자 지난 4월 7일부터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ㄹ 당 100원씩 낮췄다.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은 7월 7일부터 다시 100원씩 오르게 된다. 